

1992년 3월 3일 제123회 중의원 본회의

○ 일시: 1992년 3월 3일(화) 정오

○ 발언자:

- 야마모토 쓰토무(山元勉) 의원(일본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)
- 미야자와 기이치(宮澤喜一) 내각총리대신(대장성 관료, 정치가, 자민당 소속 참의원 의원, 경제기획청 장관, 중의원 의원, 통상산업대신, 외무대신, 내각관방장관, 부총리, 대장대신, 내각총리대신, 우정대신, 농림수산대신, 재무대신, 자민당 총무회장, 자민당 총재)

○ URL: <https://kokkai.ndl.go.jp/#/detail?minId=112305254X00719920303&spkNum=5¤t=44>

○ 해제(개요 및 특징)

야마모토 의원은 「외국인등록법」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질의에서 부가적으로 **위안부** 문제와 관련된 조선반도 출신자에 대해 보상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의함. 이에 대해 미야자와 총리는 1965년의 「한일청구권협정」 등에 의해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함.

○ 주요 내용 번역

- ▷ **야마모토** “저는 일본사회당·호헌공동을 대표하여 (중략) 미야자와 총리 및 관계대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. (중략) 또한 **종군위안부** 문제와 강제연행 문제 등과 관련해, 남·북조선 및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반도 출신자에게 성의 있는 보상을 할 생각은 없는가,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.”

(중략)

- ▷ **미야자와 내각총리대신** “(전략) 다음으로 이른바 **종군위안부** 혹은 강제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. 정부로서는 조선반도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과거의 한 시기 우리나라의 행위로 참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체험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. 또 이른바 **종군위안부** 문제에 대해서는, 지난번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중심으로 유감과 반성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, 이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관여 양상에 대해 성심성의껏 조사한다는 약속을 하였고,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일한 양국 간에는 1965년 「일한청구권·경제협력협정」에 의해 지적하신 보상 문제를 포함하여, 일한 양국과 양국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. 또 이와 병행하여 5억 달러의 경제협력도 실시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신 대로입니다.”